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최 제 민* · 김 성 현** · 박 상 연***

논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1997-2014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통해 지니계수의 추이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청의 공식 지니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 (소득 불평등 개선)함과는 달리, 노동패널조사를 통해 계산한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득불평등 수준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원인은 고소득층의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감소로 인한 전체 불평등 약화효과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개선 효과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 전체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정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주제어: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지니계수분해,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63, D31, O15, I3

투고 일자: 2017. 10. 1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8. 2. 28. 게재 확정 일자: 2018. 3. 16.

* 주저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e-mail: jmchoi@kif.re.kr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shenrykim@skku.edu

*** 공동저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e-mail: parksy@ki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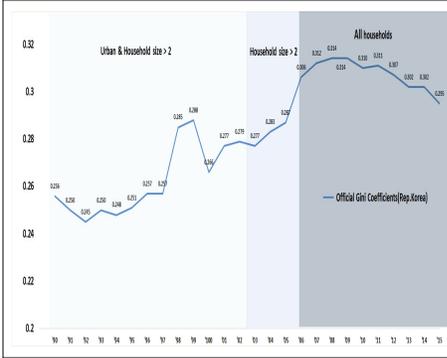
I. 서론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적 가치, 사회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 and Ostry, 2011; Ostry et al., 2014; Stiglitz, 2015). 한국사회 곳곳에서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소득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과 부의 왜곡된 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Stiglitz,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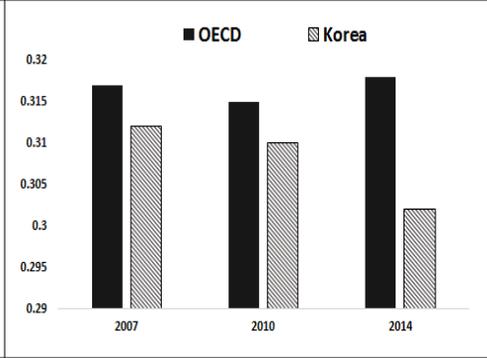
국내에서도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한국의 공식 지니계수(통계청 발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국가는 유럽의 몇몇 국가¹⁾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상황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가 지속되는 현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니계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 될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식 지니계수 추정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는 빈번한 조사대상 변경에 의한 시계열 일관성 결여, 상위 소득계층 소득 과소측정, 다른 국내외의 조사자료들과는 달리 사업자소득을 전입소득으로 정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김낙년, 2012; 통계청, 2015).

1) 해당 국가는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폴란드(OECD, 2016a) 이다.

〈Figure 1〉 Official Gini coefficient of Korea



〈Figure 2〉 Gini coefficients of OECD and Korea



Source: OECD IDD, OECD (2016a), Statistics Korea.

Note: Based on disposable income adjusted for household size.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가계동향조사를 대신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추정된 가구의 가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가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의 가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또한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가구의 가치분소득을 구성하는 각각의 소득항목이 지니계수의 추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²⁾

유사한 최근 국내 연구로 박상우·김성환(2013)은 1998-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강신욱 외(2014)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해서 1998년과 2008년 두 개년도의 가구 가치분소득 분해를 통해 소득원천별 기여도와 탄력성을 분석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소득원천별로 기여도와 한계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해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

2) 이 외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거나 국제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3장에서 다룬다.

후에 어떠한 형태로 변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산출된 지니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에 바탕을 둔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소득불평등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공식 지니계수에 나타난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처럼 일시적인 감소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추정된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35개 국가 중에서 8번째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줄었고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도와 한계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근로소득 자체의 불평등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 현상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불평등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제Ⅲ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다른 소득자료에 대해 논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소득불평등 추이와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의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니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분산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는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의 목적은 특정 소득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Lerman and Yitzhaki(1984)는 공분산 접근방법을 이용한 지니계수를 가공하여 다음과 같은

지니계수 분해 식을 유도했다.

$$G = \sum_{k=1}^K R_k G_k S_k \tag{1}$$

R_k 는 소득요소 k 와 총소득분배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G_k 는 소득요소 k 의 지니계수를, S_k 는 소득요소 k 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소득 대비 소득요소 k 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잠재적으로 전체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득요소가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즉, $G_k = 0$ 이라면, S_k 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전체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만약 S_k 가 크고 소득요소가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어떤 가구에 소득이 분배되는지에 따라 전체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온다. 만약 소득이 고소득층 가구에게로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전체불평등은 높아지게 되지만, 소득이 저소득층을 향해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전체소득불평등은 개선된다.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의 핵심은 특정 소득의 변화가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전체소득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요소 k 의 변화분을 $e Y_k$ 라고 하고 e 는 1에 가깝다고 하자. (1)번 식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소득요소 k 로 편미분 할 수 있고,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G}{\partial e_k} = S_k (R_k G_k - G) \tag{2}$$

(2)번 식의 양변을 G 로 나눈 것은 전체 지니 대비 소득 원천별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전체 지니 대비 소득 원천별 불평등이 기여하는 비중에서 전체 소득에서 원천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것과 같다.

$$\frac{\partial G / \partial e_k}{G} = \frac{S_k G_k R_k}{G} - S_k \tag{3}$$

한계효과를 모두 더하면 0이 되고, 모든 원천을 e 로 곱하면 전체 지니계수가 된

다. 이러한 지니계수분해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어떤 소득요소가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소득의 변화가 전체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소득이 전체지니계수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Lerman and Yitzhaki(1984)의 분해 방법은 지니계수에 대한 분해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이우진 외, 2016). 또한 이 방법은 지니계수분해에 사용하는 요인(예를 들어, 소득)들 외에 소득분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강신욱 외, 2014). 그러나 본 논문은 지니계수와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분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Lerman and Yitzhaki(1984)의 방법을 사용한다.

Ⅲ.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18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 추이와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실시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공식 지니계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시계열 일관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고, 소득 정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공식 지니계수 추정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하고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 논한다.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국세통계 활용을 통한 지니계수 보정 방법 대신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지니계수 추이와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실시한 이유도 논한다.

1.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1998년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특성, 소득, 그리고 소비 등을 매년 추적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다. 2009년부터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1,415가구가 추가되었다(이규용 외, 2014). 한

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에 18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가구표본과 2009년에 전국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구를 추가하면서 개편된 2009년 가구표본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8년 표본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09년 표본은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가구를 대표하기 위해 새로운 가구가 기존의 표본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98년 표본에 비해 전국가구를 더 잘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가능한 데이터가 12차 연도부터 18차 연도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³⁾

한국노동패널은 가구의 소득을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구의 총소득은 앞에 언급한 6가지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구의 소득을 조사단계에서부터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해석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패널 조사의 세후총소득(after tax total income)은 개념적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처분소득과 동일하다(한종석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분가가구를 제외한 원가구의 균등화⁴⁾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비롯한 가계동향조사(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와 가계금융·복지조사(SFLC: Survey of the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각 조사마다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가구 조사자료(household survey)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조사자료는 가구조사 설계(household survey design) 문제와 한계가 존재한다. 가구조사의 경우 소득 범위가 조사마다 다르고 현물보조, 공적이전, 자본소득과 이익 등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응답률이 소득이

3) 09년도 표본을 사용할 경우 지니계수가 98년도 표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는 98년도 표본을 대표하는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이 도시와 농어촌 가구를 모두 포함한 전국 소득불평등 보다 오히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조절하기 위하여 균등화 지수를($\sqrt{\text{가구원수}}$)를 사용하여 가구소득을 개인화하는 균등화를 실시한다(통계청 2016).

낮은 가구의 응답률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상위소득자의 소득 과소신고 경향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구조사는 표본탈락, 무응답 등의 이유로 인해 가구조사 설계를 변경하기 때문에 긴 기간에 걸쳐서 소득이나 임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로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Goldberg and Pavcnik, 2007). 이러한 가구조사의 전형적인 한계와 문제는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계동향조사의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지니계수는 OECD 평균⁵⁾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김낙년·김종일(2013)은 가계동향조사의 상위소득자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의 수준과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득세 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를 보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임을 보고하였다.⁶⁾ <Table 1>은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지니계수와 가계동향조사를 국세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한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다른 조사에서 추정한 지니계수와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보정한 지니계수가 서로 유사한 것과는 달리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는 유난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산출된 가구 총소득 지니계수는 0.311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계수는 0.357이다. 본 연구에서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직접 산출한 2011년 지니계수는 0.349(98년도 표본 기준), 0.335(09년도 표본 기준)이다.

5) 2012년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2이다(OECD, 2014).

6) 물론 대부분의 OECD국가는 국세통계를 통해 보정한 지니계수보다 조사자료를 통해 추정된 지니계수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Table 1〉 Gini coefficient by different data source and type

	HIES	SFLC	HIES (adjusted with tax data)	KLIPS (98 sample)	KLIPS (09 sample)
2010	0.310	-	0.371	0.365	0.344
2011	0.311	0.357	-	0.349	0.335
2012	0.307	0.352	-	0.350	0.334
2013	0.302	0.347	-	0.357	0.345
2014	0.302	0.343	-	0.354	0.339

Source: Statistics Korea, Kim and Kim (2013), Authors' own calculation.

Note: 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SFLC: Survey of the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도 가계동향조사의 상위 소득자 누락과 금융소득 과소보고 등의 문제로 인한 고소득자 미포착 문제가 논의되었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 발생 원인이 조사자료가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와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해 구한 지니계수는 조사자료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너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조사자료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홍민기(2016)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할 경우 국세통계를 활용해 보정한 지니계수와 보정하지 않은 지니계수의 차이가 21.2%로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할 경우 그 차이가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잦은 조사대상 분류변경으로 인해 시계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도시가계조사라는 이름으로 최초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 와중에 많은 표본개편과 변경이 있었다. 2003년부터 도시가계조사에서 놓여진 가구를 추가함으로써 전국가계조사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 1인가구를 표본에 추가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연간화 및 균등화 소득분배지표의 작성을 실시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06년부터 1인가구를 표본에 추가하였는데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4%, 2005년 19.96%, 그리고 2010년에는 23.89%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0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의 자료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역시 1998년도에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가 2009년에 농어촌 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을 나타내는 가구로 표본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 첫 조사 때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0년에 가계금융조사에서 2012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하여 조사되고 있는데 노동패널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고 관측개수 또한 다른 조사들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자료는 2012년 실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가장 많고 상위소득을 가장 잘 포착하고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활용가능한 시계열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둘째, 상위소득 누락과 같은 가구조사의 전형적인 문제들은 가계동향조사뿐만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그 정도가 가장 크다. 홍민기 외(2015)는 상위소득의 누락 정도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장 심하고 한국노동패널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서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소득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니계수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산출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고 한국노동패널조사가 그 다음으로 높고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두 조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홍민기 외, 2015).

셋째, 가계동향조사는 사업자소득 정의가 다른 조사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과소 포착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사업자소득을 순수익(수익-비용)이 아닌 전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입소득은 사업자가 벌어들인 순수익에서 향후 재투자자와 저축 등을 위한 유보분을 제외하고 가구에 전입된 소득을 뜻한다(통계청, 2015). 그런데 <Table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소속 국가 중에서 사업자소득을 전입소득으로 정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중에서도 가계동향조사만이 사업자소득을 전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에 고소득 사업자는 주로 전문직(개인병원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군이 많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저축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분이 저소득자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문제가 고소득자 소득 과소측정 문제를 일으키고 지니

계수 과소추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Data used for official Gini coefficient in OECD countries

Country	Data Type	Business income defined as Profit
Greece	Survey	○
Netherlands	Survey+Administrative	○
Norway	Administrative	○
New Zealand	Survey	○
Denmark	Administrative	○
Germany	Survey	○
Luxemburg	Survey	○
Mexico	Survey	○
United States	Survey	○
Belgium	Survey	○
Sweden	Survey+Administrative	○
Switzerland	Survey+Administrative	○
Spain	Survey	○
Slovak Rep.	Survey	○
Slovenia	Survey+Administrative	○
Iceland	Survey+Administrative	○
Ireland	Survey+Administrative	○
Estonia	Survey	○
UK	Survey	○
Austria	Survey	○
Israel	Survey	○
Italy	Survey+Administrative	○
Japan	Survey	○
Czech Rep.	Survey	○
Chile	Survey	○
Canada	Survey+Administrative	○
Turkey	Survey	○
Portugal	Survey	○
Poland	Survey	○
France	Survey+Administrative	○
Finland	Survey+Administrative	○
Korea	Survey	×
Hungary	Survey	○
Australia	Survey	○

Source: Statistics Korea (2015).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 추이와 지니계수 분해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가장 적합한 조사 자료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한국노동패널이 모든 소득을 세후소득(가처분 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은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한 분석의 한계점이다. 예를 들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분석하게 되면 시장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조세제도 등의 제도적 변화에 의한 부분까지 합산한 결과만을 보게 된다.

3. 국세청 자료(국세통계)를 통한 지니계수 보정의 한계

가계동향조사의 고소득층 과소포착 등의 문제점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 의해 지적되어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보정하는 방법도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김낙년, 2012; 김낙년·김종일, 2013; 홍민기, 2015; 국회입법조사처, 2016). 하지만 본 연구는 국세통계를 활용하는 대신에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지니계수 추이 분석과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실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최상위층 소득집중도 파악에 용이한 반면 중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정보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 김낙년(2012)에 따르면 소득세 자료는 소득분포의 상층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비과세 또는 면세점 이하의 계층은 아예 배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통해 지니계수를 보정하려면 국세통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자료도 함께 활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국세통계에는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이 불가능하다. 국세통계로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외에 가구의 소득을 구성하는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 자료는 개인정보 비공개원칙 등의 특성상 개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는데도 한계가 존재한다(한중석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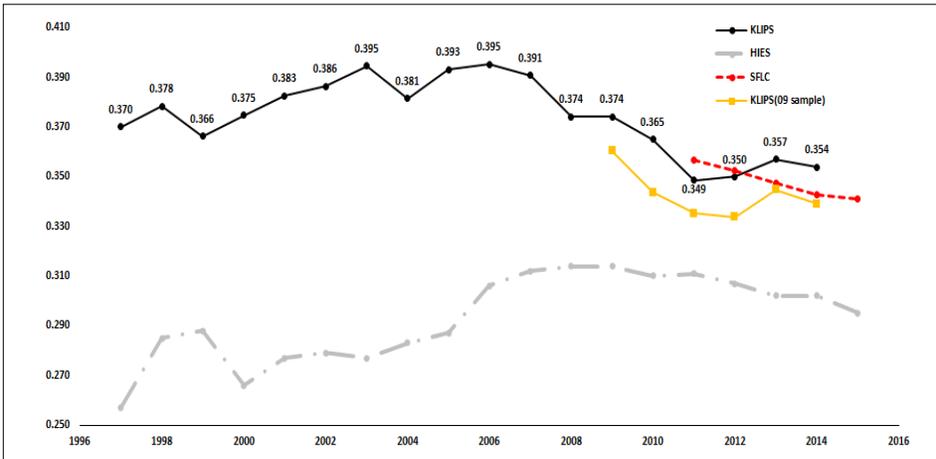
셋째, 지니계수를 사용해 불평등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경우 국세통계를 사용하여 보정한 지니계수보다 조사자료를 사용한 지니계수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Table 2>는 OECD 국가별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보여준다. <Table 2>에 나타난 것처럼 조사자료를 사용해서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를 작성하는 국가가 더 많다. 총 34개 국가 중에서 조사자료를 사용하는 국가는 22개 국가이고,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국가는 10개 국가, 행정자료만 활용하는 국가는 2개 국가다. 물론 더 많은 국가에서 조사자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조사자료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한 자료에 비해서 더 나은 자료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니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니계수 산출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국가간의 비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조사자료를 사용한 지니계수가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국제적 비교에 있어서도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1. 한국의 지니계수 추이와 수준

<Figure 3> Gini coefficients based on different data set in Korea



Source: Statistics Korea, authors' own calculation.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사용하여 산출한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6년에 0.395의 최고점을 도달한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200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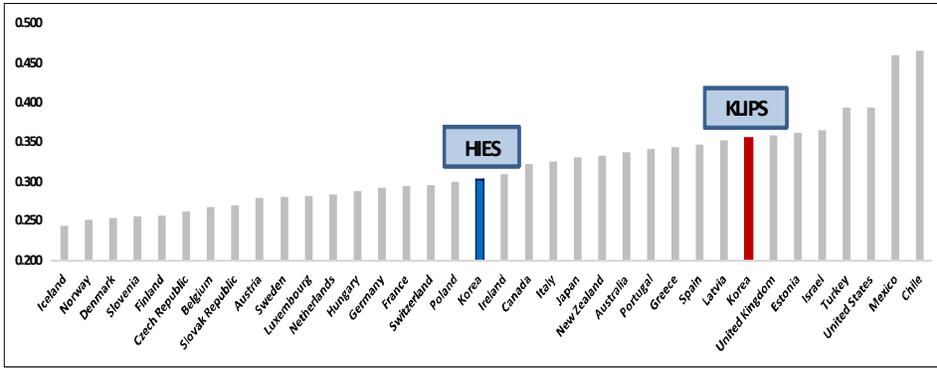
년에는 0.349까지 내려갔다. 그 후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시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0.357에 달했다가 2014년에 소폭 감소하여 0.354를 기록했다. 반면 〈Figure 3〉에서 나타난 한국의 공식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해서 산출한 지니계수 추이는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소득불평등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또한, 〈Figure 3〉은 각기 다른 조사로부터 산출된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가계동향조사가 사업자소득의 정의를 순이익 기준이 아닌 가구 전입소득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4〉는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ure 4〉에 나타난 것처럼, 2014년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35개 국가 중 18번째로 중간정도에 위치하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로 계산한 지니계수에 따르면 35개국 중 8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지니계수의 평균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0.355, 가계금융·복지조사는 0.350, 가계동향조사는 0.306으로 다른 조사와 가계동향조사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OECD (2015)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0년간 대부분의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상위소득자의 자본소득 감소와 정부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2010년부터 소득불평등도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OECD 대부분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 2016a).

〈Figure 4〉 Cross-country comparison of Gini coefficients



Source: Statistics Korea, authors' own calculation, OECD (2016a).

2.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결과

(1) 소득원천별 한계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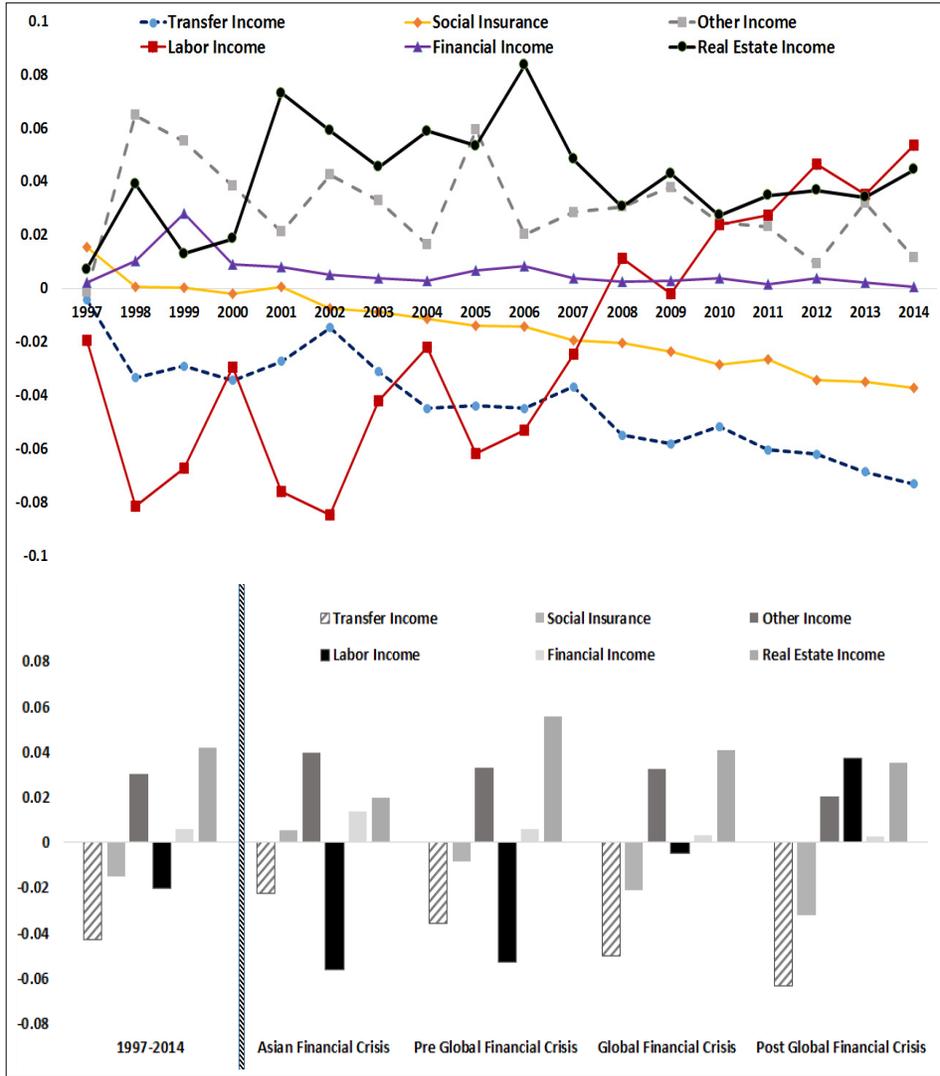
Lerman and Yitzhaki(1984)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사용하면 식 (2), (3)에 나타난 것처럼 총소득을 구성하는 개별 소득의 지니계수 한계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한계효과는 소득 k 가 1% 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 변화로 정의된다. 특정소득의 한계효과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면 해당소득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한계효과만큼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 특정 소득의 한계효과가 음(-)의 값이 나온 경우, 해당소득의 1% 증가가 한계효과만큼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 가처분소득은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니계수를 이러한 소득별로 분해하면 각 소득별 지니계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Figure 5〉의 전체기간 소득원천별 한계효과의 평균을 보면, 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 소득 항목 중에서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 근로소득의 증가는 지니계수를 감소(소득불평등 완화)시키고, 기타소득,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증가는 지니계수를 증가(소득불평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에 대한 음(-)의 한계효과가 가장 큰 소득 항목은 이전소득으로 나타났고 양(+)의 한계효과가 가장 큰 소득항목은 부동산소득이다. 이는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가장 큰 반면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5〉 Trend and period average of marginal effects by income source in Gini decomposition

(Unit: %)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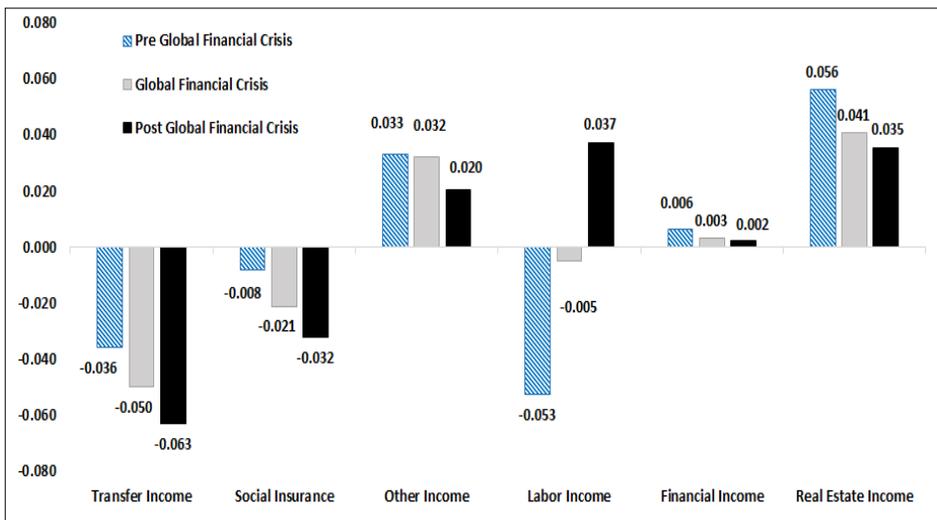
그러나 기간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나눠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원천별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전체기간

과는 다른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음(-)의 한계효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커진 것을 알 수 있고, 기타소득의 한계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의 한계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음(-)의 한계효과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 양(+)의 한계효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한계효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소득의 한계효과는 외환위기 기간 이후 크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Figure 6〉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동안 각 소득별 한계효과의 평균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서두에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는데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분석 결과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6〉에 나타난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은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의 양(+)의 한계효과 감소와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지니계수 음(-)의 한계효과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한계효과가 금융위기 이전 음(-)의 값에서 위기 이후에 양(+)의 값으로 반전된 것이다.

〈Figure 6〉 Marginal effect by income source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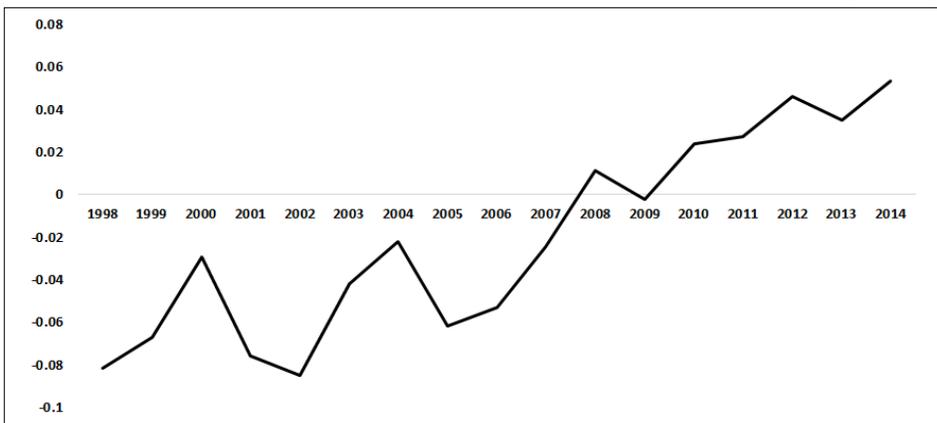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KLIPS.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의 지니계수에 대한 양(+)의 한계효과가 감소했다는 것은 두 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주로 고소득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생각하면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개선은 가구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부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인한 개선으로 보인다.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지니계수에 대한 음(-)의 한계효과가 증가한 것은 두 소득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정도가 커진 것을 뜻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근로소득의 한계효과 변화에서 나타난다. <Figure 7>에 나타난 지니계수에 대한 근로소득의 한계효과 추이를 보면 2007년 이전 근로소득의 한계효과는 음(-)의 값에서 2008년부터 양(+)의 값으로 반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1 퍼센트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한계효과(퍼센트)만큼 감소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근로소득의 1 퍼센트 증가가 오히려 한계효과만큼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Figure 7> Marginal effect of labor income Gini coefficient

(Unit: %)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KLIPS.

우리나라 가구의 총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84.4%)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분배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심각하게 왜곡된 구조로 전환하였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가구는 근로

소득의 비중이 전체 가구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은 대부분 고소득자들에게 편중되어있다. 이전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구조로 전략한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가구 자체의 노력으로 빈곤을 벗어나거나 소득계층을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세계적으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30년간 세계화와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숙련(skilled worker)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unskilled worker) 간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Dabla-Norris et al., 2015).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해볼 때 근로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세계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 증가, 높은 청년실업률,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등 다양한 원인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원천별 상대적 기여도 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소득원천별 상대적 기여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3>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한 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0.0042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0.0191로 나타나면서 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은 금융위기 이전 각각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0.0216, 0.1171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0.0128, 0.0851로 감소했다. 가장 중요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위기 이전 0.7892에서 위기 이후 0.8698로 증가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결국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감소하고 이전소득의 음(-)의 기여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가 일어났지만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기여도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Table 3〉 Relative contribution by income source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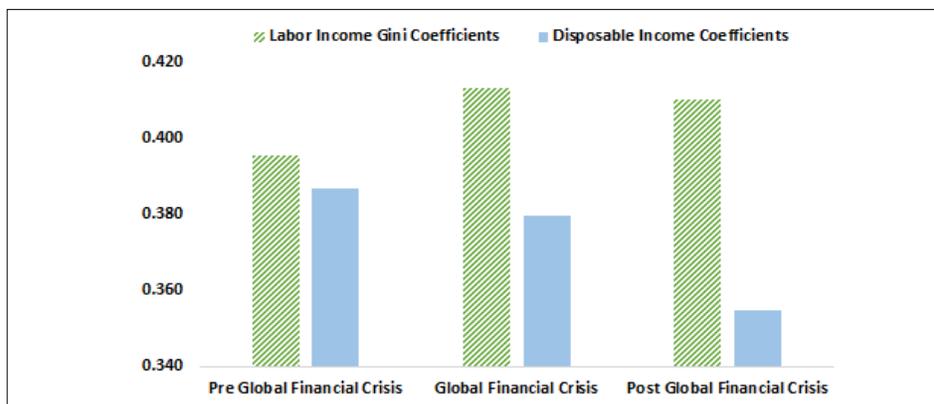
Income Type	Pre Global Financial Crisis	Global Financial Crisis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Transfer	-0.0042	-0.0098	-0.0191
Social Insurance	0.0125	0.0119	0.0128
Other	0.0639	0.0607	0.0386
Labor	0.7892	0.8285	0.8698
Financial	0.0216	0.0165	0.0128
Real Estate	0.1171	0.0921	0.0851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KLIPS.

(3) 근로소득 지니계수 불평등 추이 비교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통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근로소득의 한계효과와 상대적 기여도가 근로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8〉은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즉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를 따로 측정하여 전체소득 지니계수와 비교한다. 〈Figure 8〉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기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위기 이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금융

〈Figure 8〉 Disposable income versus labor income Gini coefficients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KLIPS.

위기 이후에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원천별 분해에서 나타난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근로소득 지니계수의 양(+)의 한계효과 증가 및 기여도 증가 결과와 일치한다.

(4) 세부소득별 한계효과 분석 결과

〈Table 4〉는 총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 소득의 세부소득 항목을 사용하여 지니계수 분해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모든 소득 항목 중에서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소득항목은 근로소득으로 나타났고,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항목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전체기간으로 확장하면 보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소득항목은 부동산매매차익이었고 근로소득은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가장 큰 소득항목이었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증가 효과는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소득은 전반적으로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한계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그 규모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전소득 항목 중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도움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근로소득 다음으로 음(-)의 한계효과가 높았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모든 소득 항목 중에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소득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48.8 퍼센트로 OECD 평균 12.1 퍼센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⁸⁾.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노년층이 심각한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정부보조금보다는 자녀들의 도움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8)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며, 빈곤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들의 비중이다. 한국의 빈곤율은 2007년 14.4 퍼센트에서 2014년 11.4 퍼센트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년층(65세 이상) 외의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a).

〈Table 4〉 Marginal effect on Gini coefficient by specific income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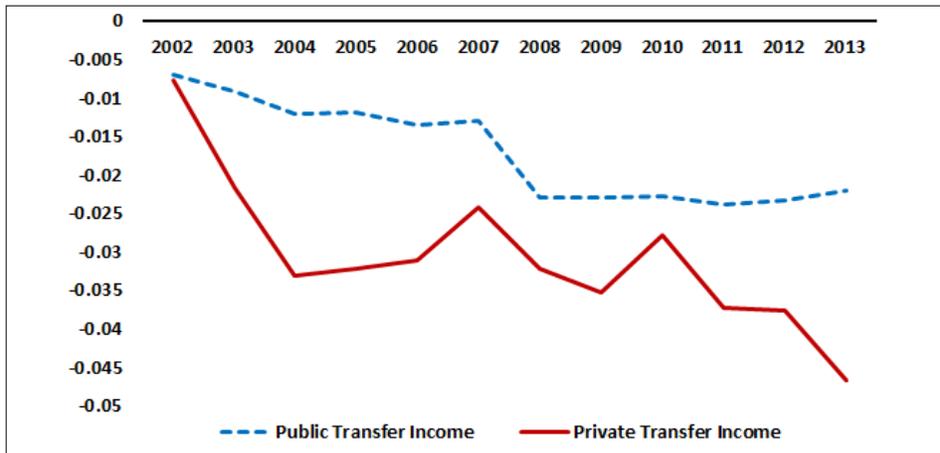
	Source	2006	2010	2013
Labor Income	Labor Income	-0.0528	0.0248	0.0347
	Interest from savings in bank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0.0016	0.0011	0.0013
Financial Income	Interest from non-institutional financial products such as personal loans	0.0005	0.0002	-0.0003
	Net gains from the sales of stocks	0.0047	0.0024	-0.0001
	Dividends	0.0015	0.0001	0.0006
	Other financial income	-	-0.0001	0.0008
	Net monthly rent	0.0075	0.0065	0.0172
Real Estate Income	Net gains from sales of real estate	0.0765	0.0189	0.0135
	Other income from reting land or lot	-0.0004	-0.0007	-0.0025
	A premium or key money	-0.0001	0.0003	0
	Other real estate income	-	0.0018	0.0052
Social Insurance	National Pension Scheme	-0.0147	-0.0284	-0.035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cheme	0.0004	0.0005	0.0004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0.0002	-
	Patriots and Veteran Pensions	-	-	-
	Employment Insurance	-	-	-
Transfer Income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0.0088	-0.0099	-0.0087
	Other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0.004	-0.0123	-0.0131
	Support from social groups	-0.0006	-0.0006	-0.0003
	Support from parents (including spouse's)	0.0045	0.0091	0.0004
	Support from children who live separately	-0.0312	-0.0349	-0.0442
	Support from other relatives	-0.0044	-0.002	-0.0029
	Other transfer income	-0.0004	-0.0007	0.0008
Tax exemption to encourage employment	-	-0.0001	-0.0001	
Other Income	Insurance (payment received due to illness or accident)	0.0034	0.0004	0.005
	Insurance (refunds from cancellation or payments due to expiration)	0.0022	0.0011	0.0002
	Life Insurance	0.0007	0.0002	0
	Retirement Allowance	0.0063	0.0157	0.0127
	Donation/Inheritance	0.0042	0	0.0094
	Congratulatory/Condolence money	0.0032	0.0021	0.0007
	Winnings from lottery/Raffles/Horseracing bets	-0.0001	-	-
	Compensatory payments due to traffic accidents or natural disasters	0.0004	0	0
	Other	0	0.0047	0.0041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KLIPS.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이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Figure 9〉 참조).

〈Figure 9〉 Marginal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nit: %)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KLIPS.

V. 결 론

본 연구는 공식지니계수 추정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와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국세통계를 활용한 지니계수 보정 방법 대신 한국노동패널조사(1997~2014)를 사용하여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해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기여도 및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에 정점을 찍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상승하였으나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인 추세와 유사한 반면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산출한 공식 지니계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8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음(-)의 한계효과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소득의 비중과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의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한계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음(-)의 한계효과에서 금융위기 이후 양(+)의 한계효과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내더라도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구조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근로소득 자체의 불평등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감소 현상이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불평등 개선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에 따른 고소득층의 자본소득 감소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대한 이전소득 증가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히려 가구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의존 비중이 높은 평범한 가구 입장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과도 관련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정책의 초점이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세부소득별 한계효과를 추정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는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의 추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소득원천별 한계효과를 통해 지니계수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규명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근로소득의 한계효과가 음(-)에서 양(+)의 값으로 반전되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향후 한국노동패널조사 또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1. 강신욱 · 김현경 · 원승연 · 김근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4-04, 2014.
(Translated in English) Kang, S., H. Kim, S. Won, and K. Kim, *Causes of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Redistribu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2014-4, 2014.
2. 국회입법조사처, 『정부의 소득분배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19호, 2016.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Official Inequality Indices*, Vol. 19, 2016.
3. 김낙년,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8권 제3호 2012, pp. 75-114.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Income Concentration in Korea, 1976-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BOK Economic Analysis*, Vol. 18, No. 3, 2012, pp. 75-114.
4. 김낙년 · 김종일,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2호, 2013, pp. 1-50.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and Jong Il Kim, “Reexamining Income Distribution Ind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Vol. 19, No. 2, 2013, pp. 1-50.
5. 박상우 · 김성환, “소득불평등 추이와 요인분해,” 『경제연구』, 31, 2013, pp. 77-100.
(Translated in English) Park, Sangwoo, and SungHwan Kim, “Income Inequality Trend and Its Source Decompositio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31, 2013, pp. 77-100.
6. 이규용 · 금재호 · 안주엽 · 윤자영 · 김기현 · 이지은 · 신선욱 · 이해정 · 김기홍,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 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4.
(Translated in English) Lee, K., J. Keum, J. Ahn, J. Yoon, K. Kim, J. Lee, S. Shin, H. Lee, and K. Kim, *The 17th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Households and Individual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alysis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2014.
7. 이우진 · 광노선 · 김대일 · 이철인, 『소득불평등 심화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연구용역보고서, 2016.
(Translated in English) Lee, W., N. Kwak, D. Kim, and C. Lee, *Causes of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Polic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6.
8.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정보 보고서, 2015.
(Translated in English) Statistics Korea, *Survey of the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 2015.
9. _____,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 2016.
(Translated in English) Statistics Korea, “1/4 of 2016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16.

10. 한국노동연구원, 『1~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통합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2016.
(Translated in English) Korea Labor Institute, *1-18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ntegrated Questionnaire*, Labor Panel Team of Korea Labor Institute, 2016.
1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15.
(Translated in English) Korea Labor Institute, *1-17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er's Guide*, 2015.
12. 한중석 · 윤성주 · 최승문,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5-12, 2015.
(Translated in English) Han, J., S. Yoon, and S. Choi,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Labor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Vol. 15, No. 12, 2015.
13. 홍민기 · 강신욱 · 성재민 · 이상호 · 장지연 · 김재광 · 이지은, 『노동패널자료 연구(I)-패널 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Translated in English) Hong, M., S. Kang, J. Sung, S. Lee, J. Jang, J. Kim, and J. Lee, *Study o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I):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of Panel Data*, Korea Labor Institute, 2015.
14. 홍민기,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6-04, 2016.
(Translated in English) Hong, Minki, *Study on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Indicators*, Korea Labor Institute, Vol. 4, 2016.
15. Berg, A. G., and J. D. Ostry,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Economic Review*, 2011, pp.1-24.
16. Dabla-Norris, M. E., M. K. Kochhar, M. N. Suphaphiphat, M. F. Ricka, and E. Tsounta,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17. Feldman, A. L.,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Using Stata*, Mexican Stata Users' Group Meetings 2009.
18. Gini, Corrado, "Measurement of Inequality of Incomes," *The Economic Journal*, 31, 1921, pp.124-126.
19. Goldberg, P. K., and N. Pavcnik, "Distributional Effects of Glob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5, 2007, pp.39-82.
20. Ostry, M. J. D., M. A. Berg, and M. C. Tsangarides,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21. Keeley, B.,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ECD Publishing, Paris, 2015.
22. Lerman, R. I. and S. Yitzhaki,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4, pp.151-156.
23. Mookherjee, D. and A. Shorrocks,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equality," *Economic Journal*, 92, 1982, pp.886-992.
24.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aris, 2011.

25. _____,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2012.
26. _____, *Focus on Inequality and Growth - December 2014*, OECD Publishing, 2014.
27. _____,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2015.
28. _____, "Inequality Update 2016: Income inequality remains high in the face of weak recovery," OECD Centre for Opportunity and Equity, 2016a.
29. _____, "Social Expenditure Update 2016: Social Spending Stays at Historically High Levels in Many Countries," OECD Centre for Opportunity and Equity, 2016b.
30. Shorrocks, A.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s," *Econometrica*, 52, 1984, pp.1369-1388.
31. Stiglitz, J. E.,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in *Sustainable Humanity, Sustainable Nature: Our Responsibility*, P. S. Dasgupta, V. Ramanathan, M. Sanches Sorondo (eds.), Vatican City: The Pontifical Academy of Sciences, 2015, pp.379-399.
32. United Nations, *Canberra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UN, 2011.
33. Yitzhaki, S., "On an Extension of the Gini Inequality Index,"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983, pp.617-628.

Income Inequality in Korea in the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Jemin Choi* · Sunghyun Kim** · Sangyeon Park***

Abstract

This paper calculates Gini coefficient using th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to evaluate how income inequality has changed in Korea during 1997-2014. We decompose the Gini coefficient by its income sources to examine marginal effects from different income sources. Unlike the official Gini coefficient based on the 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improvement of inequalit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ewly calculated Gini coefficient has declined and then increased during 2012-13. Korea is ranked 8th in income inequality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new statistic.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ts income source shows that the decline in income inequality is due to a smaller negative impact of real estate and financial income and a larger positive effect from transfer income and social security income o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However, labor income's marginal effect on the Gini coefficient has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which ha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decline in Gini coeffici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mprovement i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Key Words: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Gini decomposition, global financial crisis

JEL Classification: D63, D31, O15, I3

Received: Oct. 17, 2017. Revised: Feb. 28, 2018. Accepted: March 16, 2018.

* First Auth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Finance, KFB Bldg 5-8th Fl., 19 Myeong-dong 11gil, Jung-gu, Seoul 04538, Korea, Phone: +82-2-3705-6197, e-mail: jmchoi@kif.re.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Phone: +82-2-740-1564, e-mail: shenrykim@skku.edu

*** Co-Auth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Finance, KFB Bldg 5-8th Fl., 19 Myeong-dong 11gil, Jung-gu, Seoul 04538, Korea, Phone: +82-2-3705-6347, e-mail: parksy@kif.re.kr